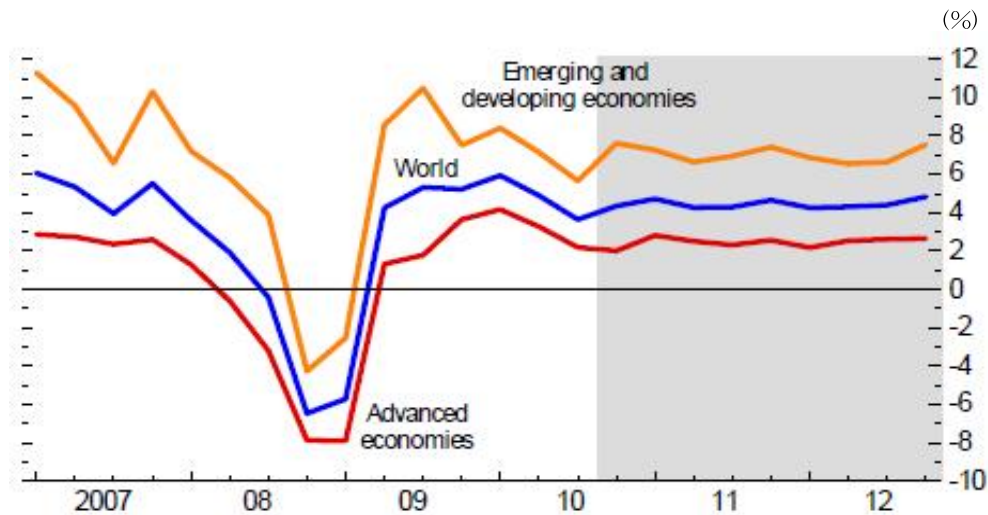


I. 세계 재정정책 흐름1)

1. 세계 거시경제 전망

- 2011년 세계경제는 지속적으로 회복되며 정상화 될 전망이지만 금융부문 부실 및 유럽의 재정위기 등으로 인해 회복속도는 느릴 전망
 - (선진국) 2011-12년 선진국의 경제성장률은 2.5%로 전망, 이는 2010년 10월 전망보다 0.25%p 개선된 수치
 - 이는 2010년 말 미국이 내놓은 새로운 경기부양책, 일본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기부양책, 독일의 국내수요 진작에 기인
 - (개도국) 2011-12년 개도국의 경제성장률은 6.5%로 전망되며 특히 아시아 개도국 및 아프리카 사하라 이남 국가들의 성장세(5.5%)가 두드러질 전망

[그림 1-1] 세계 경제성장률



출처: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 (2011.1)

1) 본 자료는 IMF World Economic Outlook(2010. 10), IMF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(2011. 1), IMF Fiscal Monitor(2010. 11), OECD Economic Outlook No. 88(2010. 11)을 발췌한 것임

- (미국) 2010년 말까지 침체상태에 있던 경기가 서서히 회복하여 2011-12년에도 3%의 성장세를 보일 전망
 - 상당한 재정건전화 정책을 시행함에도 불구하고 성장을 해치지 않을 것
 - 주택 및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며, 기업투자와 민간투자가 증가하고 노동시장이 개선되어 민간소비도 회복될 전망
- (유럽) 통화정책 운용, 기업수익 향상, 금융시장 여건 개선 등에 힘입어 국내수요가 서서히 회복될 전망
 - 회복세는 재정건전화 정책이 필요한 주변국보다 유럽 주요국에서 더 견고함
- (일본) 2011년 1사분기까지는 지난 가을 새롭게 발표된 경기부양책 및 제한적인 세제혜택 등으로 경기가 반등세
 - 그러나 2011년 중반부터는 공공지출 감소할 전망
- (기타 선진국) 호주, 캐나다, 노르웨이, 스웨덴 등은 견조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며 중앙은행은 출구전략의 일환으로 금리 인상
 - 호주는 민간소비와 주택가격 상승,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수출 증대 등 경기 회복세 강화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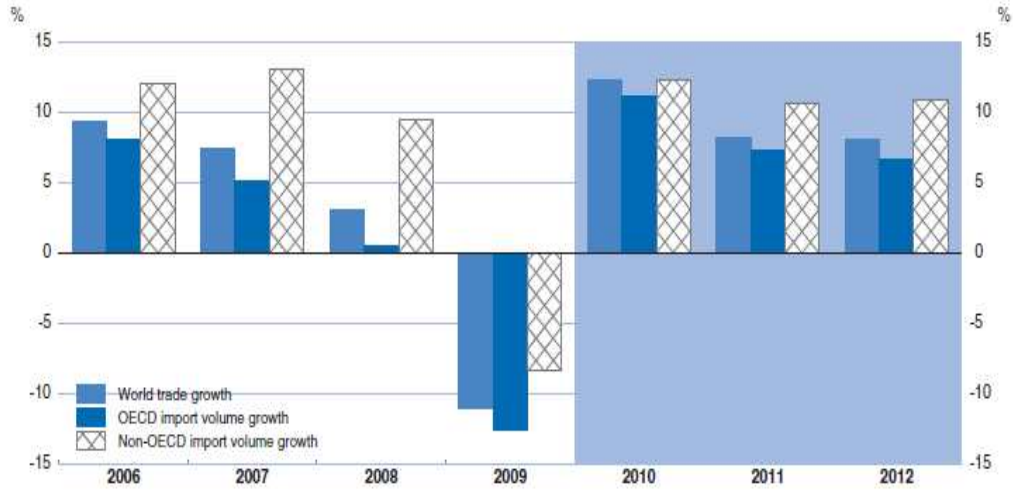
<표 1-1> 세계 경제전망

	(전년대비 %)							
	실질GDP(IMF 전망)				실질GDP(OECD 전망)			
	2009	2010	2011	2012	2009	2010	2011	2012
미국	-2.6	2.8	3.0	2.7	-2.6	2.7	2.2	3.1
유로지역	-4.1	1.8	1.5	1.7	-4.1	1.7	1.7	2.0
일본	-6.3	4.3	1.6	1.8	-5.2	3.7	1.7	1.3
캐나다	-2.5	2.9	2.3	2.7	N.A.	N.A.	N.A.	N.A.
중국	9.2	10.3	9.6	9.5	N.A.	N.A.	N.A.	N.A.
인도	5.7	9.7	8.4	8.0	N.A.	N.A.	N.A.	N.A.
중남미	-1.8	5.9	4.3	4.1	N.A.	N.A.	N.A.	N.A.
세계	-0.6	5.0	4.4	4.5	-1.0	4.6	4.2	4.6

자료 : IMF, World Economic Outlook Update, 2011. 1
 OECD, Economic Outlook No. 88, 2010. 11

- (중국) 민간소비 증가를 통해 2011-12년 성장률은 9.6%로 견조한 성장세를 유지할 전망
 - (인도) 소비와 투자 증가로 2011년 중반까지 8.4%의 높은 성장률에 이를 전망
 - (기타 아시아) 성장률은 둔화되어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수렴하는 중
 - 세계 교역량의 견조한 성장세를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 담당
 - (중남미) 상품수출과 차입을 통해 국내수요 진작, 향후 유리한 교역조건, 중국과의 교역강화, 지역간 공조 등을 통해 경기회복을 지속할 전망
 - 브라질은 국내수요 진작으로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나 환율의 평가절상으로 교역증가세는 약간 주춤한 상태
- 세계교역 회복세는 둔화되고 있으나 2012년까지 견조한 성장세를 보이며 위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전망
- OECD 국가들의 고정투자 증가로 교역량 증가
 -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투자재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향후 혁신 및 잠재성장률을 감소시킬 위험이 있음
 - 차입여건 개선, 보호무역주의 경계, 과도한 환율변동 방지 등을 통한 국제적 공조가 필요함

[그림 1-2] 세계 교역량



Note: The import volume figures include intra-region trade. Based on a trade in goods and services volume matrix in 2005, just over a half of global trade is within OECD countries, about a third between OECD and non-OECD countries and the rest between non-OECD countries.
Source: OECD Economic Outlook 88 database.

자료: OECD Economic Outlook(2010)

- 세계 부동산시장 회복세는 주춤한 상태이며, 특히 미국, 영국, 스페인, 아일랜드 부동산 시장은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
 - 미국은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제혜택 종료 후 주택 거래량이 급감하고 고실업과 더딘 경기회복세가 위험요인으로 작용할 전망
 - 영국은 2010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여 왔으나 경기회복세가 둔화되고 가계소득이 감소하면서 주택가격 하락을 예상
 - 스페인과 아일랜드는 부동산 거품이 꺼지면서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고, 향후 하락세가 지속될 전망

- 2011년에도 견조한 경기회복세가 지속되며 국제유가 및 원자재가격이 상승할 전망이고, 비유가 품목으로는 기후 등 자연요인으로 인해 농작물 가격이 상승할 전망
 - 2011년 1월 업데이트된 IMF 자료에 따르면, 2011년 유가는 배럴당 \$90로 전망하며

이는 작년 10월 전망치인 \$79보다 상당히 인상된 수치

- 2010년 말 기후조건 악화 등으로 인해 2011년 곡물가격이 11% 상승할 것으로 전망
- 선진국은 물가상승률이 1.5%로 비교적 낮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나, 개도국은 식료품 가격 인상 등으로 물가상승률이 6%까지 상승할 것으로 전망하는 등 경기과열 현상이 우려됨

2. 세계 재정전망

□ 2009년 최고치를 기록했던 재정적자는 감소할 전망이나, 국가부채 비율은 오히려 증가할 전망

- OECD 회원국의 재정적자는 2010년 GDP 대비 7.6%에서 2011년 6.1%로 감소할 전망이고 2012년에는 4.7%로 더욱 감소할 전망
 - 이는 각 국의 재정건전화 정책 및 경기순환적 요소에 기인
- OECD 회원국의 국가부채는 2011년 GDP 대비 100%를 초과할 것이고 계속 증가할 전망
- IMF에 따르면 G20국가의 2010년 재정적자 규모는 GDP 대비 6.8%, 2011년에는 5.6%로 감소할 전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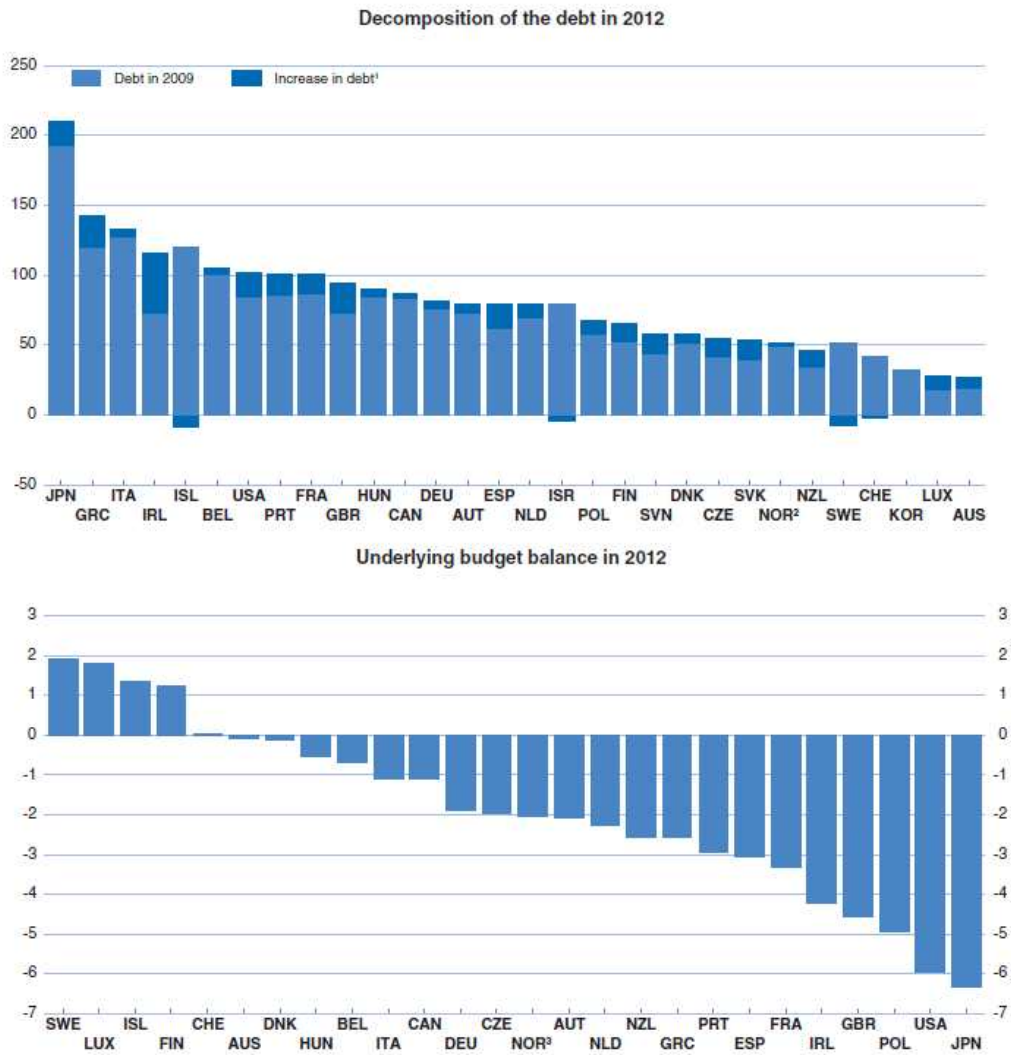
<표 1-2> 국가별 재정지표 추이 및 전망

(단위: GDP 대비 %)

	2008	2009	2010	2011	2012
재정수지					
미국	-6.3	-11.3	-10.5	-8.8	-6.8
일본	-2.1	-7.1	-7.7	-7.5	-7.3
유로지역	-2.0	-6.2	-6.3	-4.6	-3.5
OECD 국가	-3.3	-7.9	-7.6	-6.1	-4.7
국가채무					
미국	71.1	84.4	92.8	98.5	101.4
일본	173.9	192.8	198.4	204.2	210.2
유로지역	76.0	86.3	91.6	94.8	96.3
OECD 국가	79.1	90.6	96.9	100.7	102.8

자료 : OECD Economic Outlook No. 88, 2010. 11

[그림 1-3] GDP 대비 부채 및 재정수지(2012년)



1. This includes cumulated deficit for 2010-12, debt-increasing equity participations in companies and the impact of GDP growth.
 2. Cumulated deficits correspond to mainland only.
 3. As a percentage of mainland potential GDP.

자료: OECD Economic Outlook(2010. 11)

□ OECD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GDP 대비 부채비율이 60%보다 높은 수준에서 안정화되는 경우, 향후 재정정책의 효과성 및 범위를 제한하기 때문에 재정건전화 정책을 통해 부채 비율 감축이 필요함을 강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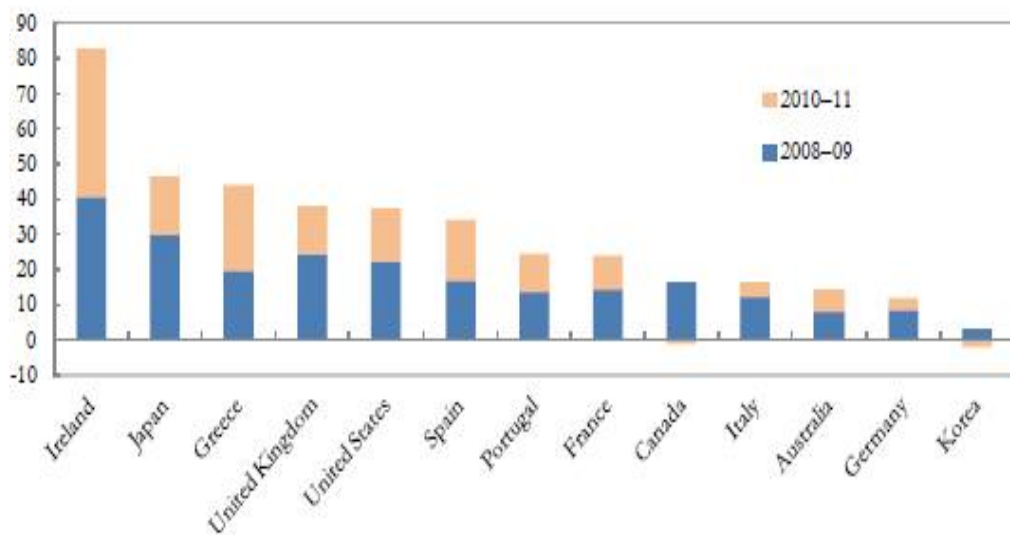
- 유럽의 경우, 재정제도의 강화를 통해 재정건전화 실행
 - 안정과 성장 조약(SGP)에서 명시한 규율을 지키고 재정정책의 공조 및 감시 체제 강화
 - 각 국가의 예산을 사전에 'European semester'에 맞추고 ECOFIN에서 제시하는 국가별 권고지침을 예산에 반영할 것
 - SGP의 조기경보 기제 강화: SGP에서 명시한 재정목표를 지키지 않을시, 과징금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음
 - SGP 시행시 부채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 고조: GDP 대비 부채비율 60% 초과시, 부채 감축 목표 및 계획을 명확히 제시해야 함
 - 최소한의 퀄리티 기준을 설정하는 등 국가별 재정제도 강화: 재정목표의 법률화, 다년간 예산안 수립, 재정전망 시스템 개선 등

□ 위 보고서에 따르면 2011년에는 이미 계획된 재정건전화 정책을 실행해 옮기고 중장기적 관점에서도 재정건전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

- 단기적으로 재정건전화 정책 속도는 1) 재정여건, 2) 공공부채에 대한 재원조달의 용이성, 3) 경기회복 속도, 4) 통화정책의 경기부양 능력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감안하여 결정하여야 함
- 중장기적 관점에서 재정건전화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지출감소 및 수입증대 정책을 수립해야 함
 - (미국) 2015년까지 재정균형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정책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. 2015년 이후에는 부채비율 감축과 같은 목표를 도입해야 할 듯
 - (일본) 2015년까지 재정적자를 반으로 감축, 2020년까지 흑자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, 고령화 등 기타 재정위험 요인 등을 고려하여 세금 인상 등 수입증대 정책이 필요
 - (독일) 중장기적으로 부채비율 감축을 목표로 하여 주요 수입 및 지출에 대한 목표를 설정, 그러나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

- IMF의 Fiscal Monitor에 따르면 각 국 정부의 재정정책 기조가 경기부양에서 재정적자 감축으로 점진적으로 전환되고 있음
 - 2010년부터 재정적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며, 경기회복 속도가 비교적 빠른 개도국(라틴 아메리카, 아시아)에서 재정적자 감소세가 빠름
 - 선진국의 재정정책은 경기부양을 지속하는 기조를 유지하는데, 유럽국가들의 경우 재정 출구전략을 시작하였음
 - 프랑스, 독일 등 주요 선진국은 2011년에도 경기부양책을 지속하여 재정적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
 - 그러나 경기가 회복되었거나(한국), 시장의 압력으로 인해(그리스, 포르투갈) 재정출구전략을 시작한 국가들도 있음
 - 개도국의 경우, 경기회복세의 영향으로 재정적자가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음
 - 라틴아메리카는 경기부양책의 중단과 경기회복, 수출증가 등으로 재정적자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
 - 아시아 개도국(인도, 말레이시아, 태국)의 경우, 경기회복과 재정건전화 정책의 시행으로 재정적자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나 중국은 대대적인 경기부양책 시행으로 재정적자 감소폭이 매우 작을 전망
 - 몇 개 국가를 제외하고는 재정적자가 국가채무 비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수준보다 높게 지속되고 있으므로 중장기적으로 국가채무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
 - 2011년까지 국가채무 비율이 감소할 국가로는 캐나다, 아이슬란드, 이스라엘, 한국, 스웨덴, 스위스가 있음
 - 나머지 선진국은 2009~2011년 사이 국가채무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며, 특히 아일랜드, 그리스, 스페인, 미국, 일본은 그 증가폭이 클 전망
 - 개도국 중 라틴아메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은 채무비율이 감소할 전망이나 유럽국가(라트비아, 리투아니아)들은 채무비율이 증가할 전망

[그림 1-4] GDP 대비 부채비율 변화(2008~2011년)



자료: IMF Fiscal Monitor(2010. 11)

- 위 보고서에 따르면 많은 국가들이 2013년 혹은 2015년까지 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세워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제시하였는데, 경제적 충격에는 유연성 있게 대처하되 재정건전화 노력은 유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
 - 단년 및 다년도 예산안에 중장기적 지출목표를 설정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화 전략을 발표하고, 매년 평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 총량 목표를 조정할 수 있음
 - 그러나 재정적자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인 타임프레임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증가하는 부채비율을 어느 수준으로 감축할 것인지 논의하지 않는 등 한계가 있음
 - 2008년 세계금융위기로 인해 재정적자가 급속히 증가한 국가들의 경우 2011년 재정적자 감축을 크게 하고, 그 다음해부터는 감축량이 감소(frontloading)하는 방식을 따름
 - 미국은 2012년 재정적자를 크게 감소시키고, 독일은 매년 일정량을 감축, 일본은 2011년 GDP 대비 0.5%p를 감축하고 차기년도에는 거의 감축하지 않을 것이며, 중국은 상대적으로 점진적인 재정건전화 계획 시행 예정

- 재정건전화 방식으로는 주로 지출 감소 정책을 취하고 있음
 - 지출감소 정책으로는 주로 임금삭감(캐나다, 그리스, 아일랜드, 이탈리아, 라트비아, 포르투갈, 스페인, 영국), 공무원 정원감축, 사회이전지출 감소(독일), 국방비 감축(독일, 미국, 영국) 등의 방식을 채택하고 있음
 - 중국 등 세입 증대를 통한 재정건전화 방식도 병행하는 경우가 있는데, 직접세(소득세, 법인세, 사회보장세) 증가가 50%를 차지하고 VAT와 소비세 증가가 25%를 차지
 - 환경세(독일, 아일랜드, 한국, 남아프리카), 수출입물품세(러시아) 등을 부과하여 세입 증대를 꾀하는 경우도 있으나, 세율을 인상하기보다는 세원을 확대하는 방식을 취해 노동시장에 왜곡을 줄이고자 함

<표 1-3> 재정건전화 계획의 구성

재정적자 (2009)	지출감축 위주	혼합 (지출감축과 세입증대)	세입증대 위주
High (GDP 대비 10% 이상)	아일랜드, 일본, 스페인, 영국	그리스, 인도, 미국	
Medium (GDP 대비 5~10%)	포르투갈, 캐나다, 프랑스, 이탈리아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, 남아프리카 공화국, 터키	러시아	
Low (GDP 대비 5% 이하)	호주, 독일, 한국, 사우디아라비아	멕시코	중국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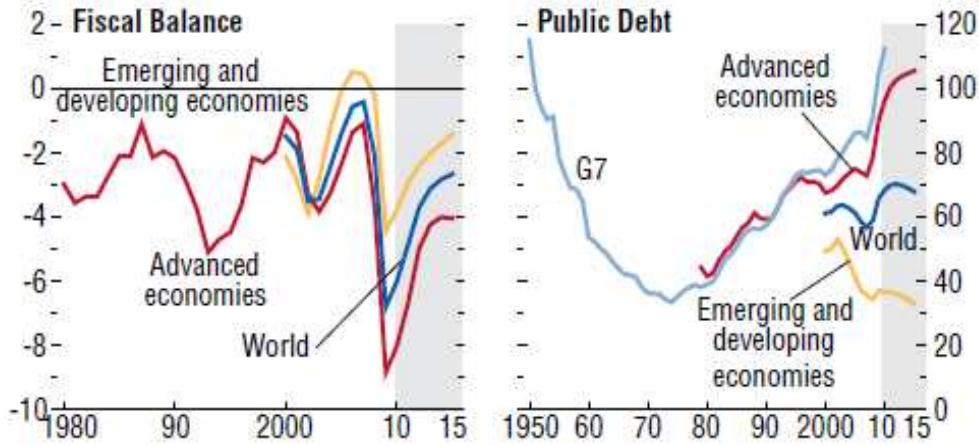
자료: IMF Fiscal Monitor(2010. 11)

- 이러한 재정적자 감축 계획이 시행되며 국가부채도 감소세로 돌아설 전망이지만, 중장기적인 부채총량목표를 설정하거나 부채감축 단계의 구체적인 경로를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음
- 중장기적 재정건전화 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의무지출(entitlement program) 관련 구조개혁이 필수적으로 수반되어야 하고 재정제도를 강화해야 함

- 연금개혁은 이미 많은 국가에서 시행되거나 시행예정되어 있는데 반해 의료비 지출 증가에 대비한 의료개혁은 많이 논의되고 있지 않음
- 선진국을 중심으로 재정제도 강화 노력이 시행되고 있음
 - 독일: 금융위기 이전부터 헌법에 균형재정 목표 도입을 고려하였고 2009년 6월부터 시행
 - 영국: 2010년 5월, 재정책임위원회(Office for Budget Responsibility, OBR)를 설립하고 이 기구를 상설화하려는 법안 제출(2011년 7월 국왕의 재가를 받을 계획), 5년 중기재정 단위로 균형재정 달성을 목표로 하는 재정법(fiscal mandate)을 확립하고 2015/16까지 GDP 대비 순부채가 감소세로 돌아서는 것도 목표로 설정
 - 일본: 2010년 중반에 발표한 중기재정계획에 PAYGO, 국채발행액 억제, 재정적자 감축 등 예산 수립시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재정건전화 방안을 제시하였음(2011년 예산안에서는 복지지출을 증가하였으나 다른 지출을 삭감하여 총지출이 거의 증가하지 않는 등 PAYGO 원칙을 따르도록 고심한 흔적이 보임)
 - 미국: PAYGO 도입, 오바마 대통령은 초당적인 재정위원회(National Commission on Fiscal Responsibility and Reform)를 설립하여 2015년까지 균형재정 달성을 위한 방안 구상하도록 하였으나, 2010년 12월에 발표된 보고서가 국회에서 채택되지 않음으로써 기능 상실

[그림 1-5] GDP 대비 일반정부 재정수지 및 부채

(단위: %)



자료: IMF World Economic Outlook, 2010. 10

- EU: 회원국의 재정상황 감독기능 강화, 구조조정, 재정위기가 우려되는 국가들에게 유동성을 지원하는 European Financial Stability Facility(EFSF) 설립, European Stability Mechanism 도입 준비, 재정규율 도입(그리스, 라트비아, 리투아니아)
- 그러나 재정보고 및 전망, 위험관리 등을 강화할 수 있는 체계적이고 시의적절한 재정건전화 노력이 필요
 - 1~2개의 재정총량에 대해 좀 더 구체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
 - 예산 수립과 승인과정에서 탄다운 방식을 적용

<참고 1> EU 차원의 재정건전화 노력

□ EU는 2010년 초반 그리스 재정위기를 겪으며 EU 차원에서 좀 더 체계적이고 종합적